

16

통 일 총 시

社會主義國家의 變化와 對 韓半島 影響

康仁德(極東問題研究所長)

통일연구소

차 례

1. 共產主義體制란 어떤 體制였는가?3
2. 社會主義國家의 改革·開放이 일으킨 變化 ...8
 - 가. 蘇聯에서의 變化—蘇聯共產黨, 蘇聯邦의 解體—8
 - 나. 東유럽과 中國에서의 變化..... 18
 - 다. 獨逸 統一..... 26
 - 라. ‘新思考 外交’와 ‘脫冷戰時代’의 到來 ... 32
3. 아직도 健在한 아시아 共產黨..... 41
4. 社會主義國家의 變化가 韓半島에 미친 影響 47

1. 共產主義體制란 어떤 體制였는가?

1917년 러시아 10월 革命으로 등장한 볼셰비키 정권은 물론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원하에 탄생한 모든 공산 국가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제시했던 政綱政策은 한결같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허용되는 資本主義 階級社會를 청산하고 勤勞大衆이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社會主義國家를 樹立하여 인민대중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경제적 풍요로움이 충만한 平等社會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約束은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중 단 한 나라에서도 실현되지 않았다. 아니 나타난 현실은 그들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政治經濟的 不平等과 貧困의 平準化가 반영된 관료지배의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였다.

모스크바 역사고문서(歷史古文書)대학 학장이며 개혁주의자인 유리·아파나세프교수는 소련형

사회주의란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불리우던 社會主義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에서 도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에 있어 反國民的인 것, 자연에 거역하는 非人間的인 것 바로 이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에 사회주의가 있었는가? 어떤 곳에 사회주의가 존재했다는 말인가? 사회주의란 라벨이고 간판뿐이었다. 실제로 이 체제가 갖고 있는 것은 全體主義的인 統治形態뿐이었다.

스탈린의 정치는 사회주의라는 카테고리에서 아무리 좋게 評價하려 해도 평가할 수 없다. 그의 정치는 전체주의적이고 犯罪的인 體制의 단계적 형성이었고 이것이 목적인 것은 자기 인민에 대한 항시적이고 계통적인 전쟁이었다.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최초 5개년계획(1928~1932) 동안 불가강과 돈강을 잇는 運河가 생겼고 새로운 工場도 세워졌다. 그러니 잘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공장은 노예화된 囚人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농민이 追放되고 集團化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아가 강제적인 집단화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수백만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련 농민이 바랐던 것은 토지를 耕作하고 자기 노동의 成果를 팔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일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스탈린의 정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목적은 인민의 希望과는 전혀 다른 데 있었다.

농민을 노예화하고 그들의 노동을 無償으로 빨아들이고, 그들의 자금을 몰수하여 자기가 원하는 近代産業을 構築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유일한 수단으로 대량 테러를 恣行하였다. 이러한 테러와 폭력에 의해 사회는 크게, 깊게, 그리고 급격히 改造되었고 이것을 통해 스탈린주의라는 것이 확립되었다.

그는 또 새로운 인간을 創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인간이란 事前에 의도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기가 그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기는 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인간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의식이 비뚤어진, 정신이 歪曲된 그리고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병든 인간을 만들어냈다. 그는 오랜기간에 걸쳐 ‘凡庸적 인간의 품종개량’을 자행했는데 이로 인해 현명한 사람은 모조리 虐殺되었으며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도 抹殺되었다. 평준화되었고 이로써 ‘凡庸적 인간의 품종개량’을 실현하였다.

이런 현상은 바로 자기 국민과의 전쟁이었다. 수천만명이 무엇때문인지도 모르고 滅亡하였다.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다는 것은 누구도 두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5,000만명이 死亡했을 것이다. 이것은 10월혁명의 결과이다. 3세대를 거치는 동안 5,000만명이 犧牲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민족의 遺傳子 염색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소련형 사회주의 재검

토)

좀 길게 引用하였지만 위 글에서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를 얼마나 비참한 국가로 轉落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근로대중을 나라의 主人으로 규정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극소수의 공산당 간부의 專制權力을 허용하는 1당 독재로 변모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근로대중은 KGB의 정치적 테러에 의해 가차없이 제거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生産手段(공장, 기업소, 토지 등)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를 실시하고 중앙집권적 命令經濟體制를 실현하였지만, 국가경제건설과 생산을 관장하는 관료들의 특권을 허용하여 生産者 大衆은 자신이 창출한 생산물에서 완전 疎外되고 말았다.

모든 言論은 당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인민의 信仰生活은 금지되었으며 각 개인의 思考와 行動이 당지배자에 의해 源泉的으로 통제되는 전체주의 사회를 실현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말살된 전체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創意力이 발휘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의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음으로써 경제성장은 沈滯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생활은 점차 窮乏한 상태로 변해 갔다. 늘어나는 국민의 不平과 不滿, 심화되는 지식인의 體制批判, 급격히 하락한 경제생산은 공산당으로 하여금 새로운 打開策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이것이 바로 體制改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社會主義國家의 改革·開放이 일으킨 變化

가. 蘇聯에서의 變化

— 蘇聯共產黨, 蘇聯邦의 解體 —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信奉하는 공산당이 수립한 1당 독재체제는 그 誕生과 함께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지만 가차없는 폭력으로 이를 극복, 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창의력의 발휘가 停止되고 경제침체

가 深化됨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黨의 엘리트였다.

그러나 아무리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엘리트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改革意志를 表面化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철의 규율이 작용하는 공산당의 組織原則에서 볼 때 당최고지휘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는한 개혁요구의 表明은 자신의 사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만한 첫 기회가 도래했던 것이다. 스탈린 사망후 權力鬭爭에서 승리한 흐루시초프는 1956년 2월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충격적인 스탈린 批判演說을 행하였는데 이 비판은 비록 스탈린 개인의 역사적 過誤를 폭로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1917년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공산당 일당통치의 무자비한 반인민적 可恐할 범죄를 폭로하여 소련 지식인과 국민들에게

볼셰비키당 지배의 실상을 처음으로 알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의 高揚은 물론 ‘解氷의 時代’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言論의 自由를 허용하였다. 이 당시 체제비판에 열중했던 모스크바 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과 연구소의 학생과 연구생들이 후에 페레스트로이카를 수행하는 主役들이 되었다. 흐루시초프의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의 經濟生産管理體制를 전환하여 지역별로 分散하고 각 기업을 이윤 중심의 獨立採算制로 전환시켜 각 개인의 노동의욕을 鼓吹시키기 위한 경제개혁이 核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소련에서의 체제변화는 고르바초프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0여년전인 흐루시초프시대에 시작된 것이고 그가 남긴 遺産이 현재 開花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85년 3월 黨書記長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경제발전의 加速化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의 개선 특히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관리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정치사회부문에서의 多

元的 民主主義, 사회주의적 人民自治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體制批判을 허용하였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은 처음부터 체제에 대한 비판과 인민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주주의와 공개(글라스노스치)의 두 支柱로 구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前任者인 안드로포프 당시 기장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명백한 개혁 스케줄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혁명’과 동의어로 규정하게 된 것은 1986년 4월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다. 이 사고는 고르바초프 개인 뿐만 아니라 소련정부와 소련국민에게 지금까지 유지해온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영성한 것인가를 立證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생각하는 方式, 心理, 組織, 일하는 態度와 方法 등 모든 부분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없이 소련사회는 再生될 수 없다고 판

단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등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思考’에 기초한 발본적 변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개혁 선언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노멘크라투라(당간부)에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하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야 할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不安과 恐怖感을 부식시켰다.

변혁의 시대에는 응당 부작용이 발생하는 법이지만 당 관료들의 부정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생산을 저해하는 온갖 부작용이 表出되었다. 억눌렸던 국민의 요구가 일시에 분출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無政府的 혼란이 확대되었다. 특히 국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일용품 공급이 순탄치 않아 국민생활은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상점의 진열장에는 식품이나 일용잡화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취를 감추었다.

뿐만 아니라 소연방에 강제 병합되었던 각 共和國의 독립운동을 誘發시키게 되었다.

가장 먼저 獨立要求를 제시한 나라들이 발트3개국이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개국은 1939년 8월 23일 소련과 나치독일간에 체결된 秘密條約(독소불가침조약 비밀의정서)에 의해 불법적으로 소비에트연방에 併呑(1940년 8월)된 국가였다. 때문에 발트3개국 국민들은 항상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念願해 왔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자 급격히 표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1988년 10월 발트3개국에서는 독립을 위한 정치투쟁조직으로 “人民戰線”이 결성되었다.

1989년에 이르러 발트3개국은 1940년의 소연방 가입결의의 무효를 선언하였고 1990년 5월까지(3.11 리투아니아 독립선언, 5.4 라트비아 독립선언, 5.8 에스토니아 독립선언) 이들 각국이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발트3개국의 獨立宣言은 소연방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 각국에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중앙 아시아 지역 여러 민족간의 對立과 暴動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각 공화국의 독립운동과 민족폭동은 개혁으로 인해 혼란상태에 빠져 들고 있던 소련의 위기를 가일층 深化시켰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혼란이 야기되자 당내에서는 그의 개혁에 대한 保守派의 비난이 강화되는가 하면 급진적인 개혁파(예를들면,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엘친)들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체제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권력투쟁으로 歸結되었으며 급기야는 “8월 쿠데타”로 나타나게 되었다.

1991년 8월 19일 야나예프 부통령, 파브로프 수상, 야조프 국방상, 쿠류츠코프 KGB의장, 푸코 내무상, 바그라노프 국방회의 제1부의장, 치자코프 국영기업 연맹의장, 스타로프체크 농민동맹위원장 등 8명의 보수 군부세력이 중심이 되

어 일으켰던 쿠데타는 8월 20일로 예정되었던 『新聯邦 條約』 조인을 무산시켰다. 이 조약이 조인될 경우 연방의 권한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연방자체가 붕괴되어 자신들의 既得權喪失이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3일만에 실패로 돌아 감으로써 보수, 군부 세력에게 더 없이 큰 타격을 안겨 주어 沒落을 촉진시켰다.

쿠데타세력과 정면으로 대치했던 러시아 공화국의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공산당의 活動中止를 명했으며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공화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의 정지와 불법화를 결정하여 일거에 공산당 解體氣運이 高潮되었다.

공산당, 군, KGB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소련의 權力構造는 옐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再編되었고, 결국 소연방의 解體로 발전되었다.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백러시아) 등 3개공화국의 수뇌는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서 회담하여 『獨立國家聯合』(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 : C. I. S)를 창설

할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회의는 또한 독립 국가연합 創設協定, 首腦宣言 그리고 經濟政策調整宣言 등 3개 문서에 조인하고 “국제법상의 주체 또는 지정학상의 현실로서의 소연방의 존재는 이제 끝났음을 선언한다”고 발표함으로써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22년 登場했던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15개 독립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엘친(러시아), 크라추코프(우크라이나), 슈시케비치(벨로루시) 등 3명의 슬라브계 공화국 수뇌가 합의한 3개 문서는 蘇聯邦 解體 이후의 이 지역 국가의 장래를 展望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獨立國家聯合 創設協定’은

(1) 소연방은 그 존재를 終熄하였음을 선언한다. (2) 구 소연방 가맹국 및 同 연합 創設 目的과 原則에 찬동하는 나라들의 가입을 환영한다. (3) 군축에 노력하며 非核地帶化와 中立을 지향한다. (4) 핵병기의 통일관리를 위한 統合同 司令部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연합의 조정기관을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經濟政策調整에 관한 宣言’은

(1) 완전한 市場 메카니즘을 창설한다. (2) 民族通貨를 발행한다. (3) 價格 自由化를 실시한다. (4) 通貨發行量을 조정하여 경제의 안전성장을 지향한다는 등의 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이 발표되자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12월 9일, 벨로루시 최고회의는 12월 10일 최고 유력 공화국인 러시아 최고회의는 12월 12일 각각 3개 문서를 批准함으로써 1922년 체결된 聯邦條約은 완전 파기되었다.

이처럼 슬라브계 3개 공화국의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되자 중앙아시아의 5개 공화국(카자흐, 타지크, 투르크멘, 키르기스, 우즈베크) 수뇌들도 12월 13일 연합 참가를 선언하였다.

이외에 아르메니아, 몰도바,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4개 공화국도 가입의사를 밝혔다.

소연방의 해체로 정치적 입지를 상실한 고르바초프는 91년 12월 25일 대통령직을 辭任하였다.

나. 東유럽과 中國에서의 變化

소련의 개혁과 함께 곧바로 격동기에 진입한 국가는 동·중유럽 사회주의 국가였다. 40여년간의 공산정권하에서 이들 나라의 지식인과 국민들은 간단없는 反共·反蘇鬪爭을 전개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경제, 사회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동·중유럽의 개혁운동은 그것이 단순한 공산당 1당독재에 항거하는 반체제투쟁의 의미 뿐만 아니라 소련의 패권주의자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民族解放鬪爭의 성격을 띤 운동이었다. 이러한 때문에 소련의 역대지배자들은 이들 나라의 개혁운동이 아무리 적은 부분의 것이라도 無慈悲하게 중단시켰던 것이다.

동·중유럽 국가에서 개혁운동이 시작된 것은 1956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격하가 선언되던 때 부터였다.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 국민들은 스탈린체제를 유지하려는 당에 抗拒하였고, 나아가 공산당을 지원하는 소련에 對抗하여 격렬한 武裝鬪爭을 전개했다.

1956년 헝가리, 폴란드의 반소·반공항쟁은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소련과 이들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기존의 정치노선과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 함을 인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반소항쟁이 진압된후 소련은 1949년 스탈린에 의해 과문되었던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는데 이것은 각국이 自國의 역사와 문화적 傳統에 따라 사회주의의 多樣한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원칙을 승인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단지 폴란드에서 집단농장이 해체 되는 등의 경제부분에서의 작은 改革이 강구될 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유럽 국가의 개혁의지는 점차 강화되었다. 그 이유는 소련식 경제체제의 矛盾이 드러나고 특히 소련이 제공해왔던 에너지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 경제발전이 停滯되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난관에 직면한 동유럽 각국은 부득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經濟體制改革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동유럽국가들은 무역확대와 자금, 그리고 과감한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해 서방국가와의 經濟協力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현상이 1967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시도한 경제체제개혁이었다.

당시의 체코 당 수뇌들은 침체된 경제를 再建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를 개혁하여 기업의 自主性を 보장함은 물론 국민 각 個人의 創造的 生産意欲을 고취하기 위해 政治的 自由化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結論에 도달했던 것이다.

1968년 두브체크政權은 광범한 경제체제개혁안 준비는 물론 EC와의 경제협력을 선언하였다. 이를 흔히 ‘프라하의 봄’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標榜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의 새로운 黨 綱領은 지식인과 국민의 절대적 支持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동유럽의 여타 국가와 소련의 안전보장에 비칠 영향을 고려한 소련의 수뇌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소위 ‘制限主權論’을 제시하고 바르샤바조약군의 탱크로 무참하게 중단시켰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社會主義 陣營의 안전을 위해 정치적 개혁(자유화)이나 대서방 경제협력요구는 중단되었지만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生産管理部門에서의 개혁은 불가피 함을 더욱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동유럽 각국은 제각기 생산관리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중유럽 국가가 택한 새로운 경제메카니즘의 근간은 중앙통제기능의 緩和, 각 기업의 자주성의 확대, 나아가 각 개인의 私營企業을 허가하는 市場原則의 도입이었다.

그후 폴란드에서는 노동자들의 自主管理運動이 시작되어 1980년대는 바웬사가 이끄는 ‘솔리다르노스치’(연대운동)가 조직되어 폴란드 공산당과 힘의 우위를 겨루게 되었고, 결국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솔리다르노스치에게 폴란드 공산당이 밀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미 공산당

의 1당독재가 한계성을 나타낸 확실한 증거였다.

이런 가운데 1986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것이다.

동유럽 각국의 당내 改革派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앞다투어 자국내의 개혁에 着手하였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와 같은 중유럽공산국가에서는 당내 개혁파가 개혁을 主導함으로써, 평화리에 급진전 되었지만, 루마니아의 경우처럼 당내 개혁세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民衆暴動이 일어나 혁명의 방법으로 체제자체를 붕괴시켰다.

동·중유럽사회주의국가의 변혁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은 당내 개혁파가 중심이 된 국가이든, 민중폭동에 의해 독재자가 처형된 국가이든 간에 일단 多元的 民主化가 인정될 경우, 거침없이 의회민주주의체제로 移行하여 1당독재를 종식시키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했다는 사실이다.

1989년과 1990년에 실시된 동유럽각국에서의 總選舉 結果는 예외없이 공산당에게 무참한 敗北를 안겨주었다. 그 결과 각국의 국명에서는 ‘사회주

의'라는 용어가 제거되었고 공산당의 당명이 바뀌었고, 분단된 국가인 독일의 경우 서독이 동독을 병합함으로써 독일통일을 실현하였다.

한편 아시아지역 공산국가인 中國에서는 소련의 개혁보다 앞서 1978년 12월부터 경제중심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중국의 경우도 역시 개혁의 필요성은 당 엘리트에 의해 천명되어 왔다. 비록 '개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調整'이라는 용어로 여러차례 경제노선의 전환을 시도한 바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56년 모택동의 '대약진', '인민공사', '총노선'이라는 3면홍기운동이 초래한 심대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1958년 채택했던 實事求是로의 전환이라 할 것이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2인자였던 劉少奇는 鄧小平 등 실용주의 옹호자들의 도움을 받아 모택동의 좌경모험주의를 비판하고 우경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른바 1959년 7월-8월 江蘇省 廬山에서 개최되었던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제 8기 중앙위 제 8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저 유명한

등소평의 ‘白猫黑猫論’(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아야 고양이이다. 좌경주의건, 우경주의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주의이다)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시작된 文化大革命에서 이들 실용주의파들은 (走資派: 자본주의의 길을 걷자는 파)로 몰려 제거됨으로써 개혁은 실패하고 말았다.

10년간 계속된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과학, 기술, 문화예술 등 모든 면에서 20년이상 後退시킨 엄청난 被害를 가져왔다. 1976년 9월 모택동이 사망하고 동년 10월 4人幫(毛澤東의 처 江靑을 비롯한 4명의 문화대혁명 주도자)이 제거됨으로써 비로소 혼란의 시기가 종료되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들은 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당중앙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문화대혁명기간과 그 이전의 ‘左傾的過誤’를 청산하고 ‘實事求是’에 따라 정치노선을 결정하고 집행키로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인민공

사와 같은 집단농장을 해체하는 ‘경제체제의 개혁’이었다.

그 요지는 계급투쟁을 핵으로 하는 사회주의건설은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고루한 정치 슬로건을 폐기하고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경제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정치노선은 ‘4개원칙’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트독재, 중국공산당의지도, 마르크스·모택동사상 견지)을 지키지만,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체제개혁을 단행하여 농업에서는 農家生産 請負制를 도입하고 상업과 공업에서는 利潤法則에 따른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12년동안 중국은 經濟特區와 開放地域을 설정하여 서방의 기업을 유치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를 도입하였다. 1989년 천안문사태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중국은 개혁·개방노선을 수정함이 없이 ‘社會主義初級 段階論’에 걸맞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굳혀가고 있다.

다. 獨逸統一

지금까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과 중국에서의 改革過程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모든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개혁은 수십년간 지속된 전체주의적 1당독재하에서 누적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 특히 소외된 대중의 生産意慾의 減退때문에 초래된 심대한 경제위기가 주원인이었다는 점과 개혁의 주도자는 역시 당내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경제개혁이 어느 한 부분에서 시작되던, 정치 경제양부분에서 동시에 병행되던 기간에 궁극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終焉과 사회주의체제의 崩壞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각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多元的 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期間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고, 때로는 보수반동세력의 저지노력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궁극에는 인류가 창조한 普遍的 價値를 존중하는 자유, 민주사회로 이행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기본 특징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989년 10월 일부 시민의 개혁 요구가 분출된지 1년만에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어 독일 통일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

동·서독이 급속하게 통일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외국인은 물론 동·서독의 어떤 정치지도자 중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만큼 개혁은 강력하게 보였던 동독의 사회주의체제를 순식간에 붕괴시키고 민족의 염원을 앞당긴 것이다. 간략히 동독국민의 반공산당 투쟁을 회고해 보자.

1951년 6월 17일 동베를린에서 발생한 반소, 반공폭동이 소련군에 의해 진압된 후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장벽이 구축됨으로써 동독인민의 서독 탈출희망도, 개혁의 가능성도 완전히挫折된 것처럼 보였다. 인구 1,700만에 불과한 동독이지만 공산당(사회주의 통일당)의 당원은 230만으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여 7명당 1명의 비율이었다. 한편 비밀경찰의 숫자는 관계자의 말에 의

하면 협력자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넘었으니 만나는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면 秘密警察이라 생각할 정도로 감시의 눈이 번득이었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창하고 그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던 1987년만해도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은 이책을 동독국민이 보는 것을 금지시켰다.

1989년 6월 중국에서 天安門 事件이 발생하자 동독 공산당과 정부는 중국공산당의 流血鎮壓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호네커일당의 반개혁주의 의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는 동독공산당의 위세가 당당했던 시절에 東獨市民들의 대규모 西獨脫出이 감행되었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 정부가 오스트리아 국경선의 철조망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동독을 탈출하려는 시민들이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로 몰려 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문에 西獨 大使館은 탈출자로 만원을 이루었다.

8월 19일 600명, 24일 108명 그리고 9월 11일 이후 3일간에는 15,000명이 헝가리를 경유 서독에 탈출했다. 9월 30일에는 프라하 경유 5,500명, 바르샤바 경유 800명의 동독시민이 동독정부가 제공한 特別 列車便으로 서독에 탈출했다.

이처럼 동독시민의 대탈출이 시작되었던 10월 1일 호네커는 ‘동독을 탈출하는 자에게 한방울의 눈물도 필요없다.’고 하였으니 이 보도에 접한 東獨市民의 感情이 치솟아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을 정밀히 검토한 고르바초프는 10월 7일 동독건국 40주년 기념식에서 동독 당중앙위원들에게 ‘너무 늦게 오는자는 인생에 벌을 받는다’는 경고조의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동독시민들의 민주화, 개혁 시위는 확산되기 시작하여 베를린 障壁의 撤去가 發表되던 11월 9일까지 수백만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개혁시위를 전개했다.

이때까지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은 22만(전인구의 1.2%)에 달하였으며 그 와중에서 호네커의

사임(10월 23일), 슈토프내각 총사직(11월 7일) 그리고 11월 9일 동독시민의 大脫出이라는 정치 위기를 책임지고 당정치국원 전원이 경질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최초 4일간에 400만의 동독시민들이 서독으로 밀려 들었고 11월 28일 서독의 콜수상은 『독일통일 10개 항목안』을 발표하고 국가연합을 거쳐 聯邦制 統一을 실현시킨다는 長期構想을 천명하게 되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인민의회선거에서는 보수신당인 基督教民主同盟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어 5월 18일 양독간 「통화, 경제, 사회 동맹조약」이 조인되고 7월 1일 발효됨으로써 사실상 통일이 실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동독의 서독편입 뿐이었다. 동년 7월 22일 동독은 분단 이전의 5개 주로 해체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것은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5개주가 각기 연방가입의 길을 열기 위함이었다.

8월 31일 동서독간에는 統一條約이 체결되고,

10월 3일 통일된 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하는
歷史的 統一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독일통일은 동독에서 일어났던 개혁의 연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동독에서 일어났던 無血革命은, 처음에는 독일통일을 위한 반란은 아니었다. 그것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동유럽 각국에서 일어났던 개혁이나 폭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독공산당의 관료주의적,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종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개혁을 위해 시작되었던 동독혁명이 ‘독일, 하나의 조국’이라는 동독 국가의 첫구절이 대중의 口號로 등장하며 ‘統一’로 급선회한 시기는 1989년 11월 중순의 일이었다. 이때만 해도 이 구호에 갈채를 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1월하순이 되자 급변하기 시작했다. 동독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목소리는 서독과의 통일을 요구하는 소리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개혁의 구호’가 ‘통일의 구호’

로 전변된 직접적인 원인은 11월 9일 동독지도부가 全 國境線을 開放한 바로 그때임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서독을 방문했던 동독시민들이 그곳(서독)에서, 그들이 원하는 개혁의 목표〈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풍요〉가 존재함을 발견한 때문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서독에 있음을 발견한 동독시민들은 복잡한 개혁의 길을 걷기보다는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일거에 희구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한 것이다. 이러한 동독시민들의 희망에 호응한 서독시민의 統一念願이 마침내 독일통일을 成就시킨 것이다.

라. ‘新思考 外交’와 ‘脫冷戰時代’의 到來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哲學’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한 그때부터 고르바초프

는 ‘新思考’를 무척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新思考’란 무엇을 뜻하였는가?

그말의 뜻을 가장 明白히 밝힌 글은 1987년 7월 10일 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실린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소장 프리마코프박사의 논문 ‘대외정책의 새로운 철학’이었다.

이 논문은 오늘의 세계를 ‘상호의존적인 世界’로 규정하고 있다.

프리마코프소장은 이 논문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 세계의 상호의존성은 모든 부문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살아남아야 한다〉에서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世界經濟의 존재와 발전, 環境保護나 이른바 제3세계의 후진성의 극복...등 전인류의 이익에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尖銳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때문에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4가지원칙에 따라 모든 나라의 대외정책은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국가안전보장상 가장 주시해야 할 문제는 政治的 方策에 의거하는 것이다. 군사력의 균형, 공포의 균형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없다. 美·蘇간, NATO와 바르샤바조약 기구간의 협정, 신뢰조성 조치야말로 現世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치적 방책이다.

둘째, 현재의 조건하에서도 안전보장상 의의가 있는 軍事的 構成要素에 대해 일정한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군비를 방위적 성격의 것으로 전환하고 핵공격은 물론 군사행동을 먼저 하지 않도록 하며 군사적수단에서 ‘合理的 充分性の 原則’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 충분성’은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군비를 의미한다.

셋째, 일방의 안전은 타방의 犧牲을 통해서 保障되지 않는다. 즉 상호의 안전보장, 공통의 안전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국가이익을 양립시킬 수가 있다.

새로운 對外政策의 哲學은 서로 상이한 나라의

국가이익의 객관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러한 국가 이익을 대립(대항)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兩立시키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릴 필요성이 있다.

넷째, 美·蘇간의 대결, 兩陣營間의 대결을 수평적으로 확대하지 아니한다. 지역분쟁을 모두 미소간의 대립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그 지역, 그 국가의 문제로 한정시켜야 한다.

이와같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철학은 자기나라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理性的으로 再構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신을 나타낸 것이며 나아가 외부세계는 결코 敵對國家가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정책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체제나 국가가 사회주의의 적대세력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본주의는 그 나름대로 自己革新을 통해 고도의 성장력을 발휘하고 있는 체제이며, 따라서 資本主義國家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군사경제를 발전시키고 군비확장이나 신식민주의적 수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認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었다.

이러한 사고는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의 대자본주의인식(레닌의 ‘제국주의론’)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고르바초프의 新思考哲學은 사회주의국가는 자본주의국가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인류가 당면한 과제, 범지구·범세계적인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과거처럼 敵對勢力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協力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사고철학은 이미 고르바초프가 취임하자마자 발표한 對西方政策에서 나타났다.

그는 1985년 여름 “모든 핵실험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며 동시에 미국의 SDI(전략방위구상)에도 반대한다”고 하였다.

1985년 11월 제네바에서 레이건 대통령과의 첫 회견에서 앞으로 양국수뇌의 對話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86년 1월에는 ‘금세기 말까지 모든 핵무기를 전폐하기 위한 15년계획’을 제안하였다.

이해 10월 레이카비크(아이슬랜드수도)에서 레

이건 대통령과 회담하고 ‘전략핵무기의 50% 삭감’을 제의하며 역으로 레이건대통령의 ‘완전폐기안’을 이끌어냈으며 11월에는 인도를 방문하여 라지브 간디 수상과 共同聲明을 발표하여 ‘핵무기와 폭력이 없는 세계의 제원칙에 관한 델리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서방국가지도자들은 고르바초프의 提案들을 유토피아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11월 그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가 미국과 영국에서 출판되자 급격하게 그에 대한 세계각국의 신뢰가 높아졌다.

다음달 12월 고르바초프는 워싱턴을 방문하여 레이건대통령과 중거리핵미사일(INF) 전폐협정에 조인함으로써 美·蘇間의 군비확장경쟁을 軍備縮小로 轉換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88년 2월에는 5월 15일부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소련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여 10개월내에 완료시킬 것이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3월 15일에는 사회주의 각국이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

적인 社會主義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尊重한다는 “新베오그라드宣言”(유고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공동선언)을 發表하였다.

그리고 5월말에 네번째의 미소수뇌회담을 개최하여 INF폐기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갖고 있던 ‘악마의 제국=소련’이라는 대소인식을 완전히 解消시킴으로써 ‘소련은 적대국이 아니라 同伴者’임을 최종 확인시켰다.

이렇게 되자 그 여파는 유럽으로 급속히 번져갔다.

1989년부터 유럽配置 INF가 철거되었고 이어 통상전력 삭감교섭이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도 고르바초프는 일방적으로 500기의 전술핵병기를 유럽에서 撤收하는 조치를 취했다.

동년 7월 고르바초프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유럽의회에 참석하여 ‘유럽공동의 집’ 構想案을 제안하고 이어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바르샤바조약기구 수뇌회담에 참가하여 1968년 이후 동유럽제국에 適用시켰던 ‘브레즈네프 독트린’(제한주권론)을 부정하는 커뮤니케를 채택토록 하

였다.

동년 10월 동독건국 40주년 축하집회에 참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호네커 동독공산당서기장의 反改革政策을 비판하였는데 이것이 베를린장벽의 崩壞로 확대된 동독 민중항의운동에 불을 붙인 결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르바초프의 新思考外交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40여년간 지속된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결정적요인으로 되었다.

1989년 12월 몰타에서 부시, 고르바초프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공식적인 ‘東西冷戰의 종식과 신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1년후인 1990년 11월 파리에서 34개국의 전유럽 국가가 참가하는 ‘전유럽안보협력회의 수뇌회의’가 개최되어 유명한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선언」이 採擇되었는데 이 선언은 “유럽에 있어서의 대립과 분단의 시대가 종식되고 尊敬과 協力の 새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유럽에서 더이상 사회주의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유일한 정치시스템으로

되었다는 것과 모든 구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이행한다는 것을 다짐한 것이었다. 다시말해서 ‘파리선언’은 공산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에 의해 패배를 하였음을 공식확인한 문서라 할 것이다.

이로써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경제, 정치·군사적 공산주의 운명공동체인 코메콘이나 바르샤바조약기구의 解體가 迫頭하게 되었다.

1991년 6월과 7월에는 드디어 코메콘과 바르샤바조약기구가 正式으로 解體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라졌으며 동서간의 冷戰이 完全종식되었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냉전의 종식은 급속히 아시아지역으로 옮겨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시키는 강력한 壓力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3. 아직도 健在한 아시아 共產黨

위에서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는 이미 ‘對立과 分斷의 時代’가 종식되고 「尊敬과 協力の 時代」에 들어 섰다.

그러나 전유럽안보협력회의 수뇌회담에서 의장을 담당했던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이 폐회연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럽지역에도 아직 경계해야 할 허다한 위기요인 〈경제적 불균형·민족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수습하기 곤란한 민족분규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이라 할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이러할진데 하물며 여타지역 〈특히 중동이나 아시아지역〉에서 위기요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紛爭의 불씨는 아직 세계도처에 남아 있으며 협력과 평화의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상당기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과거의 共產圈을 형성했던 소련과 동유럽에서

는 공산당독재체제가 崩壞되었지만 아직도 1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몇개의 공산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具體的으로 지적한다면 쿠바,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등이다.

간략히 이들 잔존 공산국가의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자.

먼저 미국의 코앞에 위치하고 있는 쿠바는 지금까지 소련의 지원을 받아 反美鬭爭의 尖兵役割을 담당했지만 소련방의 붕괴로 치명적 타격을 받고 있다.

1991년 9월 이후 쿠바주둔 소련군의 철수가 시작되고 군사원조는 물론 경제원조까지 완전 중단되었다. 이제 소련이 각공화국으로 분리되어 더 이상 지원할 실체도 능력도 없지만 만약 소련의 대쿠바지원이 계속된다면 소련에 대한 서방국가의 지원이 없을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원조중단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쿠바의 카스트로대통령은 작년 10월 당대회를 개최하고 카스트로체제의 유지, 복수정당제 도입

반대 등 종전과 같은 공산당독재체제의 견지를 확인하는 한편, 파탄직전에 있는 經濟再建을 위해 새로운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부분적인 經濟開放路線을 결정하면서 중국, 북한, 베트남에게 경제지원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中國 外交部는 명백하게 대쿠바경제지원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쿠바의 경제적궁핍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결국 카스트로 정권의 붕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한편 아시아의 4개공산국가는 여전히 健在하다.

11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6,700만의 베트남, 400만의 라오스, 그리고 2,200만의 북한을 합치면 아직도 세계인구의 1/4을 점하는 지역에서 공산당독재가 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세계적 규모에서 공산주의 자체가 完全崩壞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91년 8월 소련에서의 쿠데타실패와 소련공산당의 해체, 그리고 蘇聯邦의 分解는 위 4개국 공산당지도자에게 심대한 충격을 안겨 주

었다.

중국의 경우 연이어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되어 소련의 여파가 중국내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했는가 하면 당내 단결을 호소하는 각종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고르바초프가 辭任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전개하며 사회주의의 옹호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한이나 베트남, 라오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注目할 점은 이들 아시아4개국공산당이 이데올로기적 共同戰線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사실이다.

1991년 10월 북한 김일성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과 북한간의 友好關係가 계속 견고함을 언명했는가 하면 11월 쿠엔 반 린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베트남관계의 正常化가 실현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5년 베트남전쟁이 종결되기까지 중국과 베트남관계는 돈독했다. 그러나

베트남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양국관계는 급격히 冷却되었는데 특히 1978년 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이후 양국간의 대립은 尖銳化되었다.

이러한 대립관계가 최근에 와서 급속히 화해의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말할필요도 없이 소련공산당의 解體와 같은 大變革이 발생하여 양국의 국제환경이 불리해진 때문이었다.

중·베트남 양국은 우선 자신들의 대리전쟁장화한 시아누크파와 폴포트파 현 집권세력간에 전개되고있는 캄보디아내전을 종결짓자는데 합의하여 1991년 10월 캄보디아 平和協定을 조인하였으며 이어 11월에 베트남 수뇌부의 중국방문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시아각국 공산당정권은 소련에서의 격변결과가 자국에 미치지 않도록 극도의 警戒心을 발휘하면서 國內統制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산주의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간의 和解와 連帶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상호간의 연대강화가 이웃

비공산국가(ASEAN제국)와 서방측을 자극하여, 자기들에 대한 경제협력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점이 또하나의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말하자면, 구체적인 同盟關係를 형성하지 않은채 理想的 結束과 共產黨獨裁體制를 다같이 유지하면서 防禦的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서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12년간의 경험을 살려 지속적인 經濟體制改革과 對外開放政策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1986년부터 경제부문에서의 개혁(시장원리의 도입)과 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서방국가의 資金과 技術도입을 기도하고 있다.

北韓의 경우도 현재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社會主義國家의 變化가

韓半島에 미친 影響

위에서 지적한대로 殘存 아시아공산국가들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화가 자국에 영향을 미쳐 동유럽국가와 소련에서 처럼 共產主義體制를 뒤 흔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 戰戰兢兢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끝까지 1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擁護하며 사회주의의 完全勝利를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자신의 이러한 우려는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밝힌 글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策動으로 말미암아 國際舞臺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으며 이것은 나아가 분열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人民앞에 새로운 障礙와 難關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적인 革命路線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적공세로써 반 혁명적공세를 맞받아 나갔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전체 근로자들을 새로운 大進軍運動으로 힘 있게 불러 일으켰다.

당의 영도밑에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투쟁함으로써 온갖 도전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쳤다. ...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때에 미제와 굳게 맞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끄떡하지 않고 계속 주기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민들속에서 경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1991년 김일성 신년사)

위에서 引用한 金日成의 말인즉,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간에 북한만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인민대중의 강력한 신뢰를 받아 동요없이 사회주의체제를 지켜나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북한내에 社會主義國家에서의 變化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김일성의 주장은 한낱 허세를 부린데 불과하다.

그는 자본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자체가 동유럽 국가나 소련의 社會主義體制를 崩壞시킨 動機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요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 이행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 길로 되돌려 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인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조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고 지배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경제체제를 고치도록 강요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침략을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새로운 더 큰 침략의 길로 나가면서 파국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늘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난관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제국주의라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기만적인 원조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며 단지 자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1991년 김일성 신년사)

위 글에서 金日成은 改革과 開放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사회주의체제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파괴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혁과 개방은 체제유지를 위해 결코 許容해서는 안된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體制改革과 對外開放없이 는 북한경제를 되살릴 방법이 없다.

종전에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아온 경제협력이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가지 실례를 들면 1989년까지만 해도 蘇聯의 對北原油供給은 연간 80만톤에 달했지만 이것이 1990년에는 41만톤 수준으로 격감되더니 1991년에는 그 10분의 1에 불과한 4만여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한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사회주의국가의 변화가 북한경제에 대해 얼마나 深刻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다.

가장 큰 타격은 貿易部門에서 일어나고 있다.

1989년의 경우 북한의 무역총액 47억 9,100만달러 중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比重이 69.2%로 33억 1,600만달러 였는데 이중 소련과의 무역이 23억 9,800만달러로 전체무역고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武器와 原油價格은 국제시장가격의 30% 수준인 이른바 ‘友好價格’으로 공급해 왔는데 이것이 1990년부터 폐지되고 國際價格으로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년 11월 새로 체결된 무역협정에 의해 1991년 5월부터 代金決濟方式이 硬貨에 의한 지불형식으로 전

환되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은 먼저 경제부문에
서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1989년 이후 새로 등장한 동유럽과 소련
의 지도부가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국제정치무대에서 북한이 입은 打擊은 경제부문
에서의 타격못지 않게 심대하다.

1990년 9월 韓·蘇간에 國交正常化가 이루어지
게 되자 북한은 고르바초프정권을 ‘동맹국가에
대한 배신행위’, ‘사회주의대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이익과 신의를 팔아 먹은 행위’
등의 극렬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중국과의 관계강
화 방향으로 旋回하였다.

그러나 중국 역시 경제체제개혁을 실시하고 있
는 나라이고 더구나 국내경제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처지에 있으므로 소련을 대신해서
북한에 정치, 경제, 군사적지원을 해 줄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
이다.

이때문에 中國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
원을 약속하면서도, 경제부문에서는 자기들처럼

시급히 경제체제개혁에 착수하도록 勸告해 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여 연 30억달러를 넘어서자 90년 10월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였고 91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제 북한은 과거처럼 곤란할 때마다 背後에서 지원해 주던 ‘兄弟的 同盟國’을 상실한 것이 확실해졌다.

北韓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국제적 압력-개혁, 개방요구, 혁명노선의 포기, 韓國의 국제적지위 향상 등을 극복하고 악화된 경제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北韓의 다급한 입장과 새로운 극복전략으로 나타난 것이 日本과의 國交正常化 交渉이었다.

1990년 9월 북한은 일본집권당인 自民黨의 실력자 가네마루와 일본 사회당의 다나베부위원장을 北韓에 초치하여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의하고 이른바 ‘3당공동선언’(조선

노동당, 일본자민당, 일본사회당간의 9월 28일자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1년 1월부터 북한과 일본간에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되었다.

한국과 구사회주의국가와의 국교수립상황

년 월 일	국 가 명
1989. 2. 1	헝가리('88년 9월 정부간 공식발표)
1989. 11. 1	폴란드
1989. 12. 27	유고슬라비아
1990. 3. 22	체코슬로바키아
1990. 3. 23	불가리아
1990. 3. 26	몽 골
1990. 3. 30	루마니아
1990. 9. 30	소련
※ 1990. 9. 14	대한무역공사와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 간에 무역대표부 설치합의 1991. 1. 30 업무개시

北韓이 日本과의 國交正常化交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反證하는 것이며 한편 대외정책의 변화를

立證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韓·日本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이 일본에서 받은 액수정도의 돈을 賠償金이나 請求權 資金형태로 받는데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북한측은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를 要求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반해 일본측은 40억~50억달러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의 對北交渉條件은 북한측이 선뜻 받아들일 정도로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日本の 交渉條件의 첫째는 우선 남북대화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추진중에 있는 核武器개발을 즉각 중지하고 國際原子力機構의 核査察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교섭조건은 단순히 일본만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다.

雪上加霜으로 한국의 유엔가입노력은 1991년초부터 적극화하여 소련은 물론 중국까지도 지지하게 되었다.

다급하게 된 북한은 1991년 5월 유엔가입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어 9월 南北同時加入이 실현되었다.

북한은 더 이상 國際輿論에 저항하는 것은 자신들의 孤立化를 재촉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작년 10월 중단시켰던 제 4 차 남북고위급회담에 나오게 되었다.

이어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5 차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 대남전략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社會主義國家의 變化와 對韓半島 影響 (통일총서/16)

1991年 1月 10日 初版發行

1992年 2月 25日 2版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2洞 山73-13

電話：901-7123~4

(통연 92-2-14)

